금남로에서

신 항 락

최근 이 지역 일각에서 떠도는 2012년 대통령선거 시나리오를 듣다 보면 제법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나리오에는 대선 후보로 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노당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내지 심상명 대표, 국참당·평민당에서도 특정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 게고, 민주당에선 정동영 의원,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김근태 전 의원, 정세균 대표 중 누군가는 낙점될 거란 얘기다.

호남의 선택, 민주당이 착각한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한나라당도 정몽준 대표, 정운찬 총리, 박근혜 전 대표 중 누군가는 선택될텐데, 박 전 대표가 과연 우위를 점할 것인가. 시나리오는 그가 당내 사정상 여의치 않다면 호남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든, 탈당해 별도의 당 후보가 되든 호남사람들이 적극 밀어 대통령을 만들자는 게 그 요지다. 물론 민주당 후보로는 '수권(受權)'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의 이야기다.

한나라당은 현재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표는 안 된다'는 게 일반론이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섬짓한 '부메랑'을 의식해서다. 대선 후보 경선은 '세종시' 문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분열과 반목에 따라 '럭비공'의 개연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박 전 대표인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호남에 대해 진 빚이 있고 그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클진데, 전략적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바보' 노무현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게 호남인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각이지만 될성부르지 않은 이런 시나리오가 왜 고개를 드는가. 이 질문엔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한다. 그들 표현대로 호남은 '텃밭'이 아닌가. 정체성 상실은 착각을 동반하게 돼 있고, 거기에는 민주당 스스로 민심의 변화를 체득하지 못한 데 있다. 민주당의 기득권은 지난해 4·29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4곳 모두 민노당에 패배함으로써 이미 상실된 셈이다. 텃밭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이심전심이 지켜준 과거사일 뿐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굳이 따진다면 대안정당이라 해야 옳다. 표를 주어야할 정당이 마땅치 않으니 대안 차원에서 마지못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 경선과정을 지켜보면 대안정당인지 조차도 의문이 든다.

후보 경선에서 빚어진 당 지도부의 무원칙과 내부의 반목, 그로 인한 후유증은 하나같이 유례없는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선이 잘못됐다며 광주지법에 낸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 11건이고, 현재까지 인용 결정을 내린 게 3건이니 이 지역에선 전례없는 일이다.

변화와 개혁을 내세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들고 나온 광주시장 경선은 불법 여론조사 시비로 인해 중앙당에 재심과 검찰에 수사 의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타지역민이 후보를 검증케 하는 발상 자체도 문제였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그에 놀아난 지도부의 리더십 한계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광주·전남 7개 지역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소위 '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당과 한판 붙어보자고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무소속 연대의 등장은 일당 독점의 폐해와 부실 공천에 따른 민주당의 민심 이반현상이 가져온 결과다.

대안정당이라 할 수 있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경쟁적으로 '도덕공천'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해남군수는 공천이 확정된 직후 집안에 1억9000만원의 '검은 돈'을 숨겨둔 사실이 적발돼 감옥에 갔고 화순군수 역시 공천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민주당이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주변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망신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민선 4기를 살펴보면 더더욱 가관이다. 민주당이 공천한 전남지역 22개 기초단체장 중 비리 또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한 인사가 12명이나 된다. 광주시의원도 전체 19명 중 6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기록적이다. 이들 때문에 들어간 재보선 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르고, 이는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느 누구 사과 한마디 없다.

대안정당이란 대안이 안 된다면 바꾸는 게 정치의 생리다. 정치는 어차피 생물이 아니던가. 민주당이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2012년 대선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년 7개월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논설주간〉 hlshi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여수엑스포 D-2년 성공 개최 가능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2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총체적 준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담보할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참가국가 유치 역시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람회 기간 중 영남권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월례~낙포'구간(연장 2.6㎞) 도로 확충 사업은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람회장 까지 연결되는 도로 확충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급한 '터미널~박람회장 확장사업(연장 2.8㎞)'과 '석창교차로 입체화(연장 1.05㎞)'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있다. 숙박시설 부족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특급호텔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대회 기간 동안 무려 1만3천여개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참가국 유치도 100개국 목표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참가의사를 밝힌 나라는 50개국에 불과하다.

세계박람회는 '경제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행사다. 중국은 지난 1일 개막한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여수박람회는 총체적 준비 소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처럼 여수박람회 준비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개최 2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가 있어야 바다와 인류의 공존이라는 여수엑스포 개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

지역 6만가구가 '근로 빈곤층' 이라는데…

지속되는 경제난과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지역내에서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을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른바 '워킹푸어(Working poor)' 계층이 광주·전남에서만 6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빈곤 계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구조적으로 그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지방국체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을 밑돌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5만8000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많은 지역민이 빈곤층으로 이미 전락했거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빈곤층 확산 현상은 경기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임시직 고용이 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최근 잇단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다.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계층은 실직이나 근로능력 상실 등의 위기가 닥치면 곧바로 절대빈곤층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출렁일 때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것도 이들 계층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건설경기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구조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급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해도 장래에 희망이 없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난다면 사회적 갈등 심화 등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다. 따라서 워킹푸어 대책은 근로빈곤층을 좌절감에서 건져내고 잠재적 사회 분열 요인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절실하다. 정부는 워킹푸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은펜칼럼

강 대 석

노인문제, 일자리로 풀어야

얼마 전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이라는 노인 단체에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평균수명이 79세인데 노인 기준연령 65세는 1950년대 평균수명이 50세 중반이던 때에 정해진 것으로서, 평균수명이 늘어난 요즘에 와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노인기준 연령을 65세로 정해 놓으면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노인으로 분류되어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기초 노령연금 지급 등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8%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건의이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시군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을 둘러보면 아직 일할 수 있는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늦게 귀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평생을 고생하고 살았으니 퇴직 후엔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보내고자 한다면 그건 행복한 일면이다. 그러나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곳이 없어 복지관에서 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고싶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3~4시간씩 주 4일 정도 일하고 월 20~30만원의 소득을 보충해 주는 제도로, 올해도 도내 98개 수행기관에서 1만 7천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많은 노인들이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긍정 효과가 있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소득 보전은 물론 운동과 소외감 극복 등 건강 면에서도 효과가 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연간 18만 8천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참여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연간 6만8천원의 의료비가 더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지혜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지혜와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나간다면 노인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금 피크제의 활성화와 함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일자리를 내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며, 자기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시인〉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김 영 태

상수도 유수율 높이기 작전

과거의 상수도 정책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엔 도시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공급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질개선 및 유수율(有收率)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특히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요금수입으로 돌아오는 비율을 뜻하는 유수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상수도 경영개선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생산된 수돗물의 손실이 적다는 의미로, 수돗물 전체 생산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수돗물 생산에 들어가는 원수 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 직접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상수도의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유수율이 낮아지면 상수도의 재정악화 외에 수도관 누수에 따른 지반침하, 수돗물의 하수관 유입에 따른 하수량의 증대 그리고 수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유수율 향상을 통한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유수율 9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계량기 검침에서 누락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한 요금수량 확보 사업이다. 계량기 검침 시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량 정밀도가 높은 계량기를 꾸준히 보급하고 있으며 수돗물 다량 사용업체 지도감독 강화, 각종 공사현장에서 수돗물 사용 억제 홍보 등을 병행해 오고 있다.

둘째는 누수량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 사업이다. 유수율 증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배수관과 급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낡은 관은 녹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누수 발생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어, 광주시는 매년 내구연한이 오래된 수도관을 파악하여 교체·신규·확장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셋째는 상시 물 소비량과 누수량을 파악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의 구축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급수구역 전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수도 관망을 일정 규모로 분할(블록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면 광주시 전체의 사용량과 소비량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블록)단위의 소비량과 누수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수율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누수탐사 장비로 배수·급수관을 탐사, 누수가 발견되면 복구하는 전통적인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1990년 상수도사업본부가 출범할 당시 53.8%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지난 2009년 말 현재 82.8%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 시·도를 선도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無 等 鼓

진돗개

사람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을 꼽으라면 개가 단연 으뜸이다. 고사성어에도 개는 충직한 동물로 종종 등장한다. '나쁜 주인에게도 무조건 충성한다'는 뜻의 '걸견폐요(桀犬吠堯)'가 대표적이고, '견마지로(犬馬之勞)'에도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개는 인간이 사냥을 위해 최초로 사육한 가축이다. 인간이 사육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9500년경 페르시아의 베르트 동굴에 남아 있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개는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국견이자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돗개의 기원에 대한 설은 다양하다. 그러나 석기시대부터 한반도에 있던 개가 진도라는 섬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며 현재의 품종으로 발전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진돗개는 특히 충직성·귀소성을 비롯해 용맹성과 수렵성이 뛰어나 선천적인 사냥개로 알려져 있다. 진돗개의 탁월한 충직성과 귀소본능의 대표적 사례는 1993년 진도의 박복단 할머니의 '돌아온 백구'다. 대전의 애견가에게 팔려 갔으나 7개월 뒤 300㎞ 이상 떨어진 진도로 돌아와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진돗개의 우수성은 지난해 우리 연구진이 141개의 독특한 유전자를 찾아냄으로써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진돗개가 지난 2005년에야 세계적인 애견 클럽인 영국 캔넬과 세계애견연맹에 등록돼 명견 반열에 오른 것은 때 늦은 감이 있다.

진돗개가 이제는 미국의 경찰견으로 육성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명견반열에 오른 후 공식적인 첫 수출인 셈이다. 일단 축하할 일이지만 염려스런 마음도 앞선다. 진돗개의 장점인 한번 정해진 주인만 따르는 충성심이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진돗개의 군견 육성이 시도됐으나 불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 만큼은 경찰견으로 거듭나 진돗개의 세계화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개인 정보 유출' 부탁도 이용도 말아야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소속 단체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 지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인 듯해 결국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은근히 내 정보도 어디선가 이런식으로 새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부탁하는 것도 그렇다.

말로는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특정 후보의 홍보와 선전에 활용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거기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합법이라 설명하면서 당선된 후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 하루빨리 사라져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일본말 중 시산제(始山祭)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산(山)에 신(神)이 있다고 믿었고 그에 따른 용어들을 줄곧 사용해왔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린 산제(山祭), 혹은 산신제(山神祭)였다. 그렇게 좋은 우리 말이 왜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시산제(始山祭)라는 말로 바뀌었을까.

약 20여 년 전에 일본에서는 한 등산잡지에 'OO산악회 시산제(山岳會 始山祭)'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사진이 게재되었고 그 사진이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게 시초라고 보면 맞을 듯하다. 그 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시산제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은 게 확실하다. 지금 당장에라도 시산제라는 말은 삼가하고 우리 말인 산제(山祭), 혹은 산신제(山神祭)를 써야 할 것이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우리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고유 표현을 버리고 일본식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정진혁·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